

# 북미 대화 조속한 재개 촉진

### 외교부, 대북제재 틀 내 남북관계 발전 도모

외교부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대응방향을 대해 대북제재 틀 내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면서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안정적 상황관리와 (북미)대화 모멘텀 유지에 최우선 노력을 경주하겠다"면서 "남북관계·북미관계간 선순환 구조가 지속 유지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북미 정상회담 합의 미도출 이후 미묘한 상황인 만큼 북미 양측이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지속해 나갈 필요성 계속 주지시킬 것"이라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등 최근 상황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공조를 토대로 북측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계기에 확인된 양측 입장을 토대로, 북미 간 접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 집중 검토할 것"이라며 "이러한 접점 모색 과정에서 북미 대화의 성공을 촉진하는 우리 정부의 긍정적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또 "현재 확고히 유지되고 있는 철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양국간 각급에서의 협·조율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중·일·러 등 주변국을 대상으로 적극적 외교를 전개, 북미대화 재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 등 북한과 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도 적극 협력해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조속한 북미대화 재개 위한 긍정적 인 대북(對北) 메시지 수시로 전달하겠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외교부는 한

중 정상회담과 총리회담 등 각종 고위급 접촉 계기에 미세먼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대응조치 시사에 대해서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면서 다뤄나갈 예정이며 일측의 신중한 대응을 지속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2년 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레이지호의 추가 수색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구명별 위치 확인, 3차 원 모자이크 영상구현 관련, 현재 수색업체와 과업 인수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실종자 가족 의견, 유해수습을 위한 추가 수색시 소요되는 비용 조달 방안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추가 수색과 유해수색·수습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 도,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위해 관계기관과 맞손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등 기관별 대응책 마련 안전보안관·공익신고 활성화로 지역안전 선도적 역할 기대

전북도가 반드시 바뀌어야 할 생활속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인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도는 18일 도청에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7개 과제 중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시군 안전보안관 대표, 도교육청, 경찰청, 소방본부, 시군 공무원 등 4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하여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화재 피해를 확산시키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지역인 소방시설 주변, 주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중점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의를 통해 앞으로 14개 시군에서는 4월중 안전의식 제고와 도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안전다짐대회를 개최하고, 매일 안전 캠페인을 통해 안전 불감증에 대한 주민

인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날 도는 안전보안관 시군 대표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안전보안관은 지역 여건을 잘 알고, 활동성과 전문성을 가진 재산·안전 분야 민간단체 회원, 통·반장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성되었다.

안전보안관은 안전신고 활성화, 민간주도 안전 캠페인 활동 등을 펼쳐 생활 속 위험요소 예방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특히, 안전신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되는 올해에 지역안전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 경유차 자동차세 과세기준 바꾼다... 지방세 개편 검토

미세먼지를 과다 배출하는 경유차량의 자동차세 과세 기준이 변경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한 달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주민제안을 공모해 우수자 10건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세제를 개편하기에 앞서 일반인의 의견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접수된 제안만 124건이다. 이중 10건이 우수 제안으로 뽑혔다. 미세먼지를 과다 배출하는 경유차

에 자동차세가 무겁게 부과되도록 과세 기준을 현행 배기량(cc)에서 배기량에 연료 형태와 차값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포함됐다. 그간 가격이 아닌 배기량 위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어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역진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종전과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경우 국세와 같이 조세심판원에 재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지는 제안도 있다. 현행 지방세의 경우 지자체의 재조사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에 재청구 규정이 없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른 재산세 납세자의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분납 가능한 기준 금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하향하자는 제안이 채택됐다.

분납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분납 기한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안도 있다.

행안부는 우수 제안을 지자체와 함께 하는 '2019년 제1차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의 논의 과제로 상정하기로 했다. /뉴시스



장수교육지원청 성폭력 공무원 규탄 기자회견이 18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실시된 가운데 장수교육지원청 성폭력 피해 공무원 규탄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사과·배 재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 보험료 80% 지원...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가입 가능

전북도는 사과, 배 재배농가의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 보장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 마감시기(3월 22일(금))가 도래함에 따라 미가입 농가는 보험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18일까지 사과 배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1,440호로 지난해 동기 513호 대비 280%가 증가하였

으며, 가입률은 50%라고 밝혔다.

재해보험 가입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가입을 희망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도내 지역농협 또는 품목 농협을 방문,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가입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보험료는 국가가 50%, 전북도 및 시군이 30%를 지원하여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며 보상은 재해는 적과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피해이며, 적과 후에는 타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일소(해빛데임), 가솔동상해 피해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봄철 저온피해와 극심한 폭염으로 인한 일소피해 등 재해가 다양화되고 빈발함에 따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3월 22일까지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 공익신고·보호까지 원스톱 해결... ‘청렴포털’ 오픈

### 권익위, 기존 청렴신문고 확대·개편... 신고자 접근성 강화 신고유형 몰라도 누구나 신고... 이중인증으로 신고자 보호

부패·공익신고부터 신고자의 보호·보상 신청까지 한 곳에서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까다로웠던 신고 절차도 간편하게 바뀌고, 신고자의 신원보호는 더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패·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하고,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서비스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한 청렴포털(www.dean.go.kr)을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청렴포털은 권익위의 청렴신문고(www.1398.acrc.go.kr)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국가청렴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일반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했다.

기존 청렴신문고는 부패·공익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5개 부패유형(부패·공익·청탁·행동강령)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해야만 했다. 자신이 신고하려는 내용이 어느 범주에 해당되는지 모르는 신고자들은 이용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

이번에 개편된 청렴포털은 신고자가 부패유형을 모르더라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가령, 포털 내 간편 신고를 통해 신청한 신고는 내용·유형 분석을 통해 자동으로 유형을 추천해 준다. 관련된 보호·보상제도 안내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그동안 권익위에 축적된 관례, 심의·의결사례 등을 가공해 제작된 1000여건의 사례를 새로 공개,

신고자 작성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으로 신고자의 보호·보상 신청을 받을 수 있게 한 것도 특징이다.

신고자가 신원 노출의 우려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 인증과 이중보안 인증(인증서+비밀번호) 체계도 갖췄다.

이진석 권익위 심사기획과장은 “이번 개편으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접수부터 보호·보상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에는 공공기관에서 청렴포털을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